

전문가명의 정부 연구비

# “연구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대부분의 연구비를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과학자들은 각종 양식 제출 요구에 짓눌려 있다. 이것은 귀찮은 정도를 떠나서 연구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를 복돋아줘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연구를 방해하는 꼴이다.

金大植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과학기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연구비이다. 아니, 대부분의 실험 과학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연구비는 가이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다. 지금은 연구비가 예전보다 늘었으니 좀 낮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 정반대이다. 이제는 진정으로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이고, 국내의 동료들도 그렇지만 학회 때면 만나는 외국 친구들의 눈은 더 따갑다. 인정사정 절대로 안 봐주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의 인프라가 어떻고, start-up fund가 없어서 몇년을 날렸고, 연구비 액수가 너희들보다는 적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밖에 못하고 있다고 해봤자 전혀 통하지가 않는다. 그들이 볼 때 한국은 삼성, 현대, LG, 기아가 포진해 있는 나라이다. 입으로는 동정의 소리를 낼망정 눈빛으로는 “변명하지 마라” 아니면 “그럼 이제 너와는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잘 되었다”라는 신호를 보낸다.

## 불필요한 각종양식 요구

필자는 최근에 독일에서 몇달을 보낼 기회가 있었는데, 친한 독일 친구

들이 맥주 몇잔 마신 후 필자에게 내린 판정은 냉정했다. 국제 유명학회지에 논문은 겨우 내지만, 최첨단에서는 몇년 떨어져 있고, 만약 네가 독일에 있으면서 같은 실적을 내고서도 박사 과정 지도교수가 밀어주지 않는다면 정년보장/정교수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물론 친하니까 그렇게 솔직한 판단도 내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필자는 매우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누구누구가 독일에서 교수가 된 것을 보면 나도 찬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웃어 넘겼다.

이러한 국제경쟁시대에 과학기술자들이 연구비에 목 매달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대부분의 연구비를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기초과학기술자들의 경우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과 연구비 지급 기관의 요구에 약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들과 각종 양식이 많은 경우 귀찮은 정도를 떠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나, 국민에 대하여 연구자를 잘 관리하고 복돋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모두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엽적일지 모르나 몇가지 예를 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창의적’ 이면서도 진부한 연구 신청서 양식

연구비 신청서 양식을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표’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의아한 점은 신청서 표지에 도대체 왜 연구책임자의 집 주소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서울의 ‘달동네’ 신림 9동에 사는 필자로서는 같은 값이면 방배동이나 대치동에 사는 연구책임자보다 사정을 좀더 봐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건 그렇다고 치자. 정말 포복절도하다가 울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 연구자 믿지못하는 발상

다음의 표가 얼마나 어리석은 머리에서 나왔는가는 연구를 해본 사람이 안다. 연구추진 일정을 달 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마치 연구를 1년 안에

연구내용	연구자	2단계 1차년도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타이거	강태석 유승진	→											40,000				
범	신태지 송대식					→										30,000	
한국산 타이거	이해창 노모현	→												30,000			
사업진도(%)		25%			50%			75%			100%			100,000			
연구비(천원)		25,000			50,000			75,000			100,000						

집을 짓는 식으로 생각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화살표를 좋아하는 것은 아마도 경영학 과목 몇개쯤 수강해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더욱이 각 프로젝트마다 연구비가 얼마나 들지를 예상하고, 게다가 석달 별로 돈이 얼마나 쓰일까를 예상하라는 것은 연구를 웬만큼 몰라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정도면 거짓말 안하고 눈물이 나온다. 웃음도 나온다.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10을 4로 나누어서 2.5를 집어넣고 치운다. 왜 모든 연구자가, 모든 연구비를 신청 집행하면서 이 짓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공무원들 창의력을 더 발휘해서 이런 표의 무한한 변종을 만들어낸다. 과기부가 이런 표를 만들면 교육부는 좀더 어렵게 만들고, 산자부 공무원은 또 자기도 질세라 창의력을 발휘한다. 진정한 창의력은 이런 바보스러운 표를 아예 없애는 것인데 말이다. 신청서의 항목 또한 마찬가지다. 간단할수록 더 평가하기가 좋은 데도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난다. 목표 및 내용, 방법, 체계, 기대성과, 활용방

안... 이렇게 20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사실은 두,세가지 항목만이 필요한데 말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부서, 옆에 있는 친구보다 다르고 싶고, 이런 어리석은 창의력의 발휘는 바로 연구자에 대한 고문으로 이어진다. 끝없이 항목은 늘어나고, 바뀌는 것이다.

(2) 결과 발표 예상 학술지

이것도 내가 아는 한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바보짓이다. 연구자들은 모두 충분히 압력을 느끼고 있다.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더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연구자를 믿지 못하는 발상이라는 것뿐 아니라, 덜떨어진, 잘못된 의욕의 반영이다.

(3) 소명자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연구비를 따도 겨우 시작이다. 연구비를 다 집행하고 몇달 후에 '소명자료 요청'이라는 공문이 날아온다. '소명'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죄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은 요즘 일년에 한번은

죄인이 된다. 연구비 집행이 잘못되었으니 1백80만원을 5월 18일까지 xxx 통장에 넣으라는 내용의 공문이 오는 것이다. 사정을 알아보면, 컴퓨터를 샀는데 안 된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등등의 내용이다. 한번 더 기회를 주겠으니 변호하라는 것이 바로 '소명자료'다. 언어 자체가 고압적이고 모든 연구자를 죄인 취급하는 발상이 깔려있다. 문제는 연구비가 이미 집행되었다는 데 있으며, 연구 책임자의 월급에서 이 돈을 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비 중앙집행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지금,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연구비를 유용할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마도 1백명에 1명 정도가 있다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연구자를 다 죄인으로 가정하고 감사를 하는 지금의 행정체계는 연구 능력의 저하와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

(4) 자료요청

연구 틈틈이 머리를 좀 식히려고 하면 모모 과장이 요청해서 그러니 1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부탁한다는 이메일이 수백명의 연구자에게 날아온다.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말단 공무원으로 그게 그 내용이고 자기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집 주소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온다. 이런 류의 이메일이 오히려 연구능력을 떨어뜨리는 좋은 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연구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필요없는 형식이나 양식을 없애는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㉟